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본격 논의

1. 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5.10(화) 07:30 프레스 센터에서 2005년도 제8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회의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간사)이 참석하였음

2. 노동부 주요보고사항

□ 교육, 보건,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

○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득 1만불에서 2만불 이행과정에서 고용 확대를 경험

○ 선진국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약 200만여개 일자리 창출 가능

* 보건의료, 복지분야 비중 과소('03) : 한국 2.4%, 스웨덴 18.7% 미국 10.1%

- 복지수준 제고, 고용구조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 거양

<참 부> OECD, 관련보고 내용

3. 논의 결과

-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 관련하여 전망과 추계 필요성 제기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여건조성을 위한 진입규제 완화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추후 논의
- 8월 초순까지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노동부에서 총괄 보고
 -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추진체계와 개선대책을 보고기로 함
- 기타, 시설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일자리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기가 있었음

<첨 부>

OECD, 서비스부문의 경쟁과 개방의 중요성 강조

◆ OECD 사무국은 '05. 5. 3 각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혁신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지적

○ 서비스부문의 경쟁촉진·규제완화·개방 등의 필요성 강조

※ OECD 사무국의 「Growth in Services - Fostering Employment, Productivity, and Innovation」 보고서 주요 내용

< 1 >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들의 경험

□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경제성과 연구 결과,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요

○ 지난 10년간 호주, 캐나다, 미국은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고용과 생산성 증대 달성

-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금융·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부문

○ 한국,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 등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고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전체 고용증가의 약 60%가 통신·운송·유통·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

○ 나머지 40%는 교육, 의료 등 사회·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었는바

- 이들 분야는 고령화, 생활방식 변화, 소득 증가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 > 정책 제안

① 경쟁 촉진 및 규제개혁

- 지난 수십년간 OECD 회원국내 서비스 부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쟁 압력의 증대
 - 무역 및 국제 투자에 대한 장벽 감축과 병행한 국내 규제의 개혁으로 회사들의 효율성 증대 촉진 가능
 - ※ 미국과 호주에서는 경쟁 증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혁신 기업의 진입 증가에 의한 고용 증대 실현
 - ※ 네덜란드, 영국은 90년대 상점 영업시간 자유화로 고용 증대
-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는 가격체계에 의하지 않는 공급 체제 및 경쟁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수요 측정에 곤란
 -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공급자에 대한 시장개방, 소비자 선택 제도 도입 등 필요

② 시장 개방

- 서비스 교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20% 수준, 서비스가 상품보다 교역이 어려운 면도 있으나, 정책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
 - 자본총액 규제, 사전승인 요건, 자연인 이동 관련 특정 분야 총 고용인원 수 규제 등 법규 폐지 필요

③ 노동시장 개혁

- 서비스부문 고용률·전체 고용률·여성 고용률간 높은 상관관계 존재
 - 특히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저숙련·파트타임 등 새로운 근로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고용률 제고에 기여
- 과도하게 엄격한 고용보호법은 노동 이동성 및 기업들의 조직 혁신을 저해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

④ 추가적인 혁신정책 시행

- 그간 혁신정책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 서비스 기업들이 사업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조치 필요